

www.kpil.org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5 연간보고서

차례

공감 소개	
공감 마당 - 소통과 참여	
인권법캠프	04
월례포럼	06
자원활동	08
청소년 인권 강좌	10
사진으로 보는 2015년 공감	
2015 공감의 활동	
여성인권	16
장애인권	19
이주·난민	23
반공·복지	27
국제인권	30
취약노동	33
성소수자	37
공익법 일반	40
공익법 교육·중개	44

공감이 걸어온 길	48
공감 살림살이	50
2015 공감 나눔발상	52
함께하는 사람들 - 이사회	54
함께하는 사람들 - 구성원	56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안내	

공감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인권

구체적 삶의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법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일구고자 합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共感)은

2004년, 국내 최초의 전업적,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12년간 공감은 장애인, 폭력 피해 여성, 이주민과 난민, 아동, 홀리스, 성소수자,
 청소년노동자,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임료 걱정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친구 같은, 만만한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이 함께 하겠습니다.



공감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공익변호사가 장래 희망이라면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는 청소년들의 진지한 눈빛과 순수한 열정은 공감 변호사들을 긴장시키고 자극합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뜻깊습니다. 미래의 공익변호사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공감에게도 마음 설레는 일입니다.

청소년인권강좌





- 09 공감 정기기부회원과 함께 한 제1회 나눔밥상
- 10 한국은 인신매매 유입국!
 - 예술활동비자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일본 현지조사 및 쟁점토론회
- 11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경험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판결은 부당하다!
 - 대법원 상고를 통해 승소 판결 이끌어내
- 12 제19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수상



공감의 활동

여성인권

장애인권

이주·난민

빈곤·복지

국제인권

취약노동

성소수자

공익법 일반

공익법 교육·중개

사진
으로
보는 공감

2015년

공감의 활동 여성인권



피해 여성은 베트남 북부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그곳에는 ‘약탈혼’이라는 악습이 존재했습니다. 13살 때 이웃마을 남성에게 납치되어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그 결과 임신을 했습니다. 음주와 폭력을 일삼던 남성을 피해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낳자마자 남자가 데려갔습니다. 그 뒤로 남성과도 아이와도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한국인 남성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해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중 시아버지로부터 수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과거 출산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여성이 결혼 당시 출산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감은 이주여성인권단체와 함께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임신 출산 경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혼인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2차, 3차 가해이며, 나아가 단순 출산 경력을 문제 삼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 2015/02 이등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토론회 기획
- 2015/03/05 '이등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 개최
- 2015/04 항소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제기
- 2015/06 이주여성 상담소 법제화를 위한 활동
- 2015/06 유엔인권대표질서서 이주여성 파트 집필
- 2015/08 귀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에 대한 자문
- 2015/08 결혼이주민의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자문
- 2015/04~12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 법률교육

성폭력 피해 결과인 출산경력은 혼인취소 사유가 아니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연간보고서를 통해 예술홍행비자(E-6-2 비자)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가수로 일하는 줄 알고 한국행을 결심하나, 실제로는 '유홍接客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성매매까지 강요당합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십 년 넘도록 해왔으나 바뀐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공감은 여성인권단체들과 함께 E-6-2 비자 대안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2015년에는 과거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일본 현지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과 일본 NGO의 평가를 바탕으로 결과보고 및 쟁점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술홍행비자로 입국하여 성매매 피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필리핀 여성들에게 법률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인신매매 루트로 악용되는 예술홍행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 2015/03~ 2015/05~ 예술홍행비자(E-6-2) 소지 이주여성의 인신매매 피해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네트워크 활동
- 2015/05~ 인신매매 피해 필리핀 여성 4인에 대한 법률지원 :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 대리,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 업주에 의한 상습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형사 사건 지원
- 2015/08/31 국제이주기구와 이자스민의원실 공동주최 인신매매 지표 개발 국회 세미나 발제
- 2015/09 인신매매 대응 정책 비교연구를 위한 일본 현지 조사
- 2015/09~12 국가인권위원회 의뢰 인신매매지표 개발 자문
- 2016/02/23 '인신매매 일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쟁점 토론회-예술홍행비자 소지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토론회 주최 및 발표

한국은 인신매매 유입국

- 인신매매 루트로 악용되는 예술홍행비자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모색

공감의 활동 장애인권



2015년 초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영업장, 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관리자의 동의 없이,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마음대로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범죄경력정보 및 수사경력정보 외에도 여권발급정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사업자등록정보, 자동차등록정보, 관세사범등록정보, 납세증명서 등의 방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정보인권과 자유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공감은 이주인권, 시민단체들과 함께 위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안은 결국 2016. 3. 2. 테러방지법과 함께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업장출입조사 관련 내용은 삭제되었지만 정보인권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나머지 조항들은 별다른 논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 2015/05-06 법사위 의원실 등 방문하여 법안 문제점 설명, 보도자료 배포, 대안법안 마련
- 2015/07-08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 토론회 준비 및 개최, 대안법안 발의
- 2015/10-2016/02 국회 논의일정에 맞춰 의원실과 입법조사관을 상대로 설명 및 자료제공, 성명서 발표 등 지속적 대응 활동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제동을 걸다

A는 G국에서 왔습니다. 출신국 인구의 99% 이상이 수니파 무슬림입니다. 그런 A는 동성애자입니다. A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지인과 친척으로부터 가혹한 폭력과 학대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형사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6개월간 집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온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무작정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체류기간을 넘겨서 단속되었습니다. 공감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 있었습니다. 공감은 우선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인도적 체류허가가 나와 A는 보호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공감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은 지금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 P국 출신 난민신청자(N) 소송대리
- P국 출신 난민신청자(A) 소송대리
- P국 출신 난민신청자(F) 소송대리
- M국 출신 난민신청자(O) 소송대리
- M국 출신 난민신청자(K) 소송 및 유엔 자의적 구금 워킹그룹 진정 대리
- M국 출신 난민신청자(V) 소송대리
- G국 출신 난민신청자(A) 소송대리
- K국 출신 난민신청자(J) 난민신청대리
- E국 출신 난민신청자(H) 소송대리
- E국 출신 난민신청자(S) 이의신청대리

성적 지향을 이유로 박해 받은 난민신청자를 위한 법률지원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살고 있으나, 부모의 출신국에도 한국에도 어디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아무것도 갖지 못한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갈 수 없고, 공적으로 지원되는 장학금, 결식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주아동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됩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 부여를 논하기 이전에 최소한 한국에서 태어나는 이주아동이 자신의 출생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감은 인권단체와 함께 출생등록 워킹그룹을 만들어 현행 법제도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또한 출생등록 권리를 명시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기념행사 및 국회 전시회를 기획·주최하였고, 이주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브리프를 발간했습니다.

[출생등록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 2015/06/23 출생등록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단체 워크숍
- 2015/10/12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연구에 대한 여성정책연구원 자문회의
- 2009~2012 보편적 출생등록 도입 및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작업
- 2016/02 신경림 의원 대표 발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

- 2015/04/10 국회 전문위원 면담
- 2015/05/12 이주노동 희망센터 주최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 간담회 토론
- 2015/05/20 세계인의 날 기념 '이주아동에게 차별없는 세상' 전시회 및 기념행사 개최
- 2015/05/20 이주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공동 발행
- 2015/05/28 국회 법제사법상임위원회 법안 상정을 위한 국회 로비 활동
- 2015/06/15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작성
- 2015/09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입법촉구서 작성

출생 신고조차 못하는 이주아동의 인권 옹호 활동

공감의 활동 빈곤·복지



공감의 활동

국제인권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5일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관한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내 인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이주민 구금시설인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장기구금, 아동구금, 구금에 대한 독립된 정기적 심사의 부재 등을 지적했고, 탈북자 구금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심문센터')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배제, 장기구금, 강제퇴거 등에 대한 이의제도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공감은 법률 개정 운동,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실태조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러한 구금의 여러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시하여 왔고, 일부 법제와 관행의 개선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인권상황 심의와 관련하여 공감은 국내 83개 단체와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을 구성하여 NGO 워크숍 개최, 쟁점목록에 대한 NGO 의견서 제출, 쟁점목록에 대한 NGO 답변서 제출,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보고서 심의과정 개입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공감은 관련단체들과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을 감시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2014/09/16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구성
- 2014/10/21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제1차 NGO 워크숍
- 2014/11/18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제2차 NGO 워크숍
- 2015/01/14 쟁점목록에 대한 NGO 의견서 제출
- 2015/09/22 쟁점목록에 대한 NGO 답변서 제출
- 2015/10/17-24 유엔 자유권 심의 현지/국내 개입
- 2015/01/05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발표
- 2015/11/25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개최

이주민 구금시설과 탈북자 합동심문의 문제점을 파헤치다

-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 인권상황 심의 대응

공감은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의 구성원으로서 2014년 방글라데시에 이어 2015년 중남미의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방문하여 한국기업의 현지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테말라는 섬유 등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살해 위협, 블랙리스트, 직장 폐쇄 및 집단 해고 등으로 노조 결성이 거의 불가능한 점이 문제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온두라스는 2013년 한 한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노동자들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기저귀를 차고 일을 하는 등 심각하게 열악한 노동환경이 대대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지 노동자, 기업, 노동단체, 시민단체, 국제노조조직, 노동부, 복지부 등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 다양한 상황과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노동조합 혹은 노동운동에 대한 현지 정부와 기업 측의 탄압, 노동자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최저임금, 잦은 직장폐쇄 혹은 명의 변경에 따른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 부정 혹은 방해, 사회보장제도나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미비와 부실한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조사되었습니다. 공감은 기업인권네트워크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이슈에도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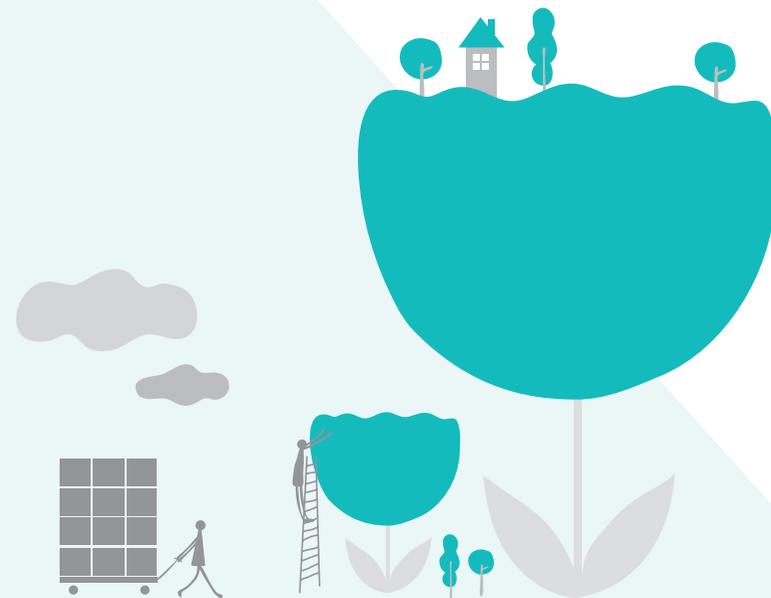
- 2015/06-09 과테말라, 온두라스 노동인권, 한국기업 상황 조사, 실태조사 준비
- 2015/09/26-10/06 과테말라, 온두라스 현지 실태조사 (정부 노동사회보장부, 정부 사회보장청, 기업인권감시단체 기업운리강령 검증위원회, 지역발전연구지원센터, 미국노총 부설 연대센터, 노동조합총연맹, 섬유산업노련, 노동권컨소시엄, 여성단체, 노동변호사들, 한국계 봉제업체 (해고) 노동자들,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간부들, KOTRA, 한국 기업, 섬유기업협회 등 방문 및 면담)
- 2015/10-12 현지 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2015/12 실태조사 보고대회 및 보고서 발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를 가다

- 과테말라, 온두라스 내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

공감의 활동

취약노동



2014년 말부터 정부는 자유로운 해고,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비정규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12월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15년 봄·가을 노사정위원회를 가동했으며, 2015년 말에는 여당을 통해 5대 노동법(근로기준법,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보호 장치가 없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비자발적으로 반복적 실업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공감은 이러한 정부의 노동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500여개 단체가 함께 만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단지 정부의 노동정책을 반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바람직한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을들의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 2015/02~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활동
- 2015/04/07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발제
- 2015/03~ 민변 노동위원회 비정규노동 정책 대응 TF팀 활동
- 2015/06/12-14 일본 나카마 유니온 방문,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정책' 강연
- 2015/09/20-30 노사정 합의 규탄 시국농성단 활동
- 2015/10-11 을들의 국민투표
- 2015/12/07 경실련 주최 노동증언대회 토론
- 2015/12/05 노동5대법안 관련 공청회 발제
- 2015/01-12 관련 기고, 인터뷰, 제도 검토 수시 진행

일자리와 임금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노동법 개악 저지 활동

‘아르바이트’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알바생’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는 비정규노동, 불안정노동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역시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지만 부업이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하는 일은 으레 ‘알바’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들 역시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공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을 고발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제도적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알바가 갑인 세상”이 될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 2015/01/05 '십대 밀바닥 노동' 출간(공저)
- 2015/03-12 호텔 아르바이트 불법 파견 사업주 집단 고발 및 대응 활동
- 2015/01-10 미용실 스태프 교육비 청구소송 피고 대리
- 2015/01-05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
- 2015/01/20 서울시교육청 주최 교사 대상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 2015/03/27 가톨릭의대 현장토론회 '청소년 노동의 현실' 발제
- 2015/04/01 아르바이트 실태 보고 및 권리 신장 토론회 토론
- 2015/05, 07 서강대 로스쿨, 이화여대 로스쿨 주최 '청소년 노동' 관련 실무 교육
- 2015/09-10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자립 지원 관련 자문
- 2015/12/21 서울시 배달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토론

청소년·청년 ‘알바’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

세월호 참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법은 필요하다. 특검도 해야 한다. 근본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상 규명이 있어서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언론도 세월호 참사를 다루기를 주저합니다. ‘그만 우려 먹어라’, ‘일상으로 돌아가라’ 라며 오히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세월호 죽이기, 세월호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범에도 위배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기소했습니다. 세월호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단원과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순직 인정을 거부하며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눈감으면서 오히려 동료 민간잠수사에 대한 사망의 책임을 덧씌우고 있습니다. 공감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해결될 때까지, 더는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대하며 활동하겠습니다.

- 2015/01~ 세월호 민간잠수사 피해에 대한 지원(관련 법령 검토 및 의견서 작성, 담당 공무원 면담, 의사자 지원 신청 대리 등)
- 2015/04~11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공동 작업
- 2015/05~ 세월호 단원과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대책위원회 활동
- 2015/03~12 416인권선언 성안팀 활동 및 제정 작업
- 2015/04/10 세월호 민간잠수사 사망에 대한 해경 고발
- 2015/05~ 세월호 집회 주최 관련 김혜진, 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 집시법 등 위반 형사사건 변호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

3개 발전소의 노심이 녹아내리며 다량의 방사능이 유출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미국 쓰리마일 사고와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에 이어 원자력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20년 간격으로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해 온 셈인데, 원자력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에너지원임이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개명하고, 독립된 심사기구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자력 안전규제를 맡게 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 2. 26. 설계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만료를 3년 앞둔 2009. 4.부터 가동이 중단된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심사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가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두 명은 사업자인 한수원의 사업에 관여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장 이해관계가 높은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안전성심사도 엉터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능 유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최신키술기준이 아닌 1970년대 건설 당시 유효했던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였습니다. 공감은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등과 국민소송대리인단을 결성하여 2015. 5. 18. 월성1호기 수명 연장허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안전은 결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 2015/03~05 국민소송대리인단 결성, 원고 모집 및 소송준비
- 2015/05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허가결정 무효확인의 소 제기 및 기자회견
- 2015/05~ 소송 진행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를 멈춰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의 소 제기

공감의 활동

공익법 교육 · 중개



공익업무를 전업적으로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에서 배출되는 새내기 법조인들 중 상당수가 공익변호사를 진로로 삼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사법연수원과 일부 로스쿨에서 전업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재정적 기반은 아직 취약합니다. 공감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전업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려는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익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범조공익모임 나누와 공동으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자립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진보네트워きの 신훈민 변호사는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변경제도를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비법조인 및 청년·청소년을 위하여 인권법캠프, 임상법학과목 지도, 로스쿨 실무수습, 공익인권법 특강, 자원활동 제도, 청소년 인권행사 등 다양한 공익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2015/01/27 공감 월례포럼 '인권, 국제인권 그리고 법관의 역할' _ 김성수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외 5회
- 2015/01/29~31 예비법조인 대상 제8회 공감 인권법캠프
- 2015/02/02~13 로스쿨 동계 실무수습
- 2015/02/23 청소년 인권행사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외 1회
- 2015/03~07 공감 21기 자원활동 제도 운영(20명)
- 2015/04/20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지원 협약식
- 2015/08/03~14 로스쿨 하계 실무수습
- 2015/07/17~18 공감 여름 인권법캠프
- 2015/09~2016/02 공감 22기 자원활동 제도 운영(19명)
- 2015/03~1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강의
- 2015/03~12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강의

부산과 광주에서 공익변호사 활동 개시 - 2차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익단체들의 공익법운동의 방식은 크게 공익소송과 공익입법운동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소수자 인권보장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이러한 제도변화를 꾀하는 것이 입법운동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소수자 영역에서도 법제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익단체에서의 입법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법안 성안부터 국회 · 정부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국회 · 정부의 입법절차 등에 관해 상세히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지원을 받아 공감과 공익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8개월 여간의 작업 끝에 부족하나마 공익입법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8개월간의 작업 끝에 발간된 공익입법 매뉴얼이 체계적인 공익입법운동의 디딤돌이 되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작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2015/02/11 공익변호사모임 회의 등 6회
- 2015/02/14 로펌 공익전담변호사 회의 등 6회
- 2015/05/14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외 1회
- 2015/06/17~20 태국 공익인권법단체 방문
- 2015/06/22~24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15 아시아 프로보노 포럼 참가
- 2015/09/07 외국법전문법률사무소협회와의 업무협약식
- 2015/10/23~24 제2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
- 2015/12/08 공익입법 매뉴얼 제작 발표회

공익입법운동의 A부터 Z까지

- 공익입법 매뉴얼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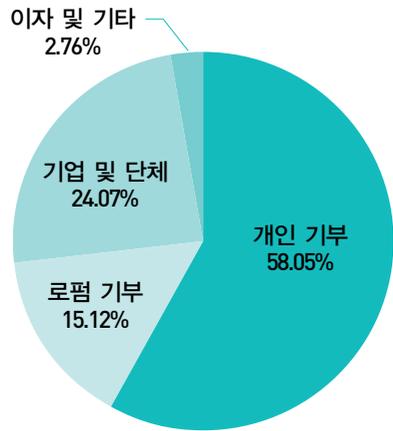


공감



살림살이

수입



개인 기부
487,29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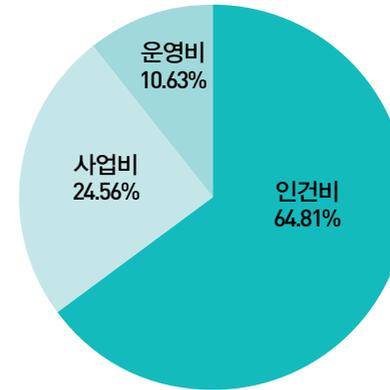
로펌 기부
126,940,000

기업 및 단체
202,012,000

이자 및 기타
23,147,000

합계
839,395,000

지출



인건비
506,898,000

사업비
192,094,000

운영비
83,142,000

합계
782,134,000

사업비	
교육·중개	14,174,000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84,000,000
법률교육/지원	3,571,000
소송 지원	9,864,000
인권법캠프	20,115,000
월례포럼	3,711,000
연구조사	10,768,000
기부회원	44,710,000
홍보	1,181,000
소계	192,094,000

운영비	
복리후생비	19,699,000
세금과공과	19,002,000
지급수수료	10,385,000
건물관리비	7,920,000
지급임차료	3,974,000
사무실유지비	22,162,000
소계	83,142,000

2015 공감 나눔밥상



공감 기부회원님
참고맙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정기기부 회원과 함께 하는 나눔 밥상을 처음으로 준비하고 기부회원들을 초대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기부자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가 얼마나 오실지 마음 졸였는데 준비한 테이블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저희 마음도 함께 가득차았습니다.^{^^}

공감의 오랜 기부회원인 KBS 정세진 아나운서께서 이번에도 흔쾌히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품격 있는 진행 덕분에 공감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사전행사로 공감 오픈하우스를 진행했습니다. 공감의 막내 변호사 김수영 변호사가 기부회원들께 사무실을 안내했습니다.

2008년부터 공감과 연대해 활동해온 해외 입양인 단체 트랙의 정제인 대표께서 입양인의 삶과 단체의 활동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1회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이주민지원 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을 설립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지운 변호사도 오셔서 활동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눔 밥상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기부자들이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기부자들이 오셔서 공감과의 인연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소박하고 진정성 있는 기부자들의 이야기에 오히려 공감 구성원들이 더 감동하였습니다.

이재현 학생은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했다'를 읽고 공감 기부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데 장래 희망이 공익변호사라고, 꼭 공감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미소짓게 했습니다.

2015년, 그리고 지난 12년간 공감이 지속해서 활동해올 수 있는 것은 모두 기부회원들 응원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변함없는 활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열렬한 공감과 성원 고맙습니다!

- 2015년 공감 나눔밥상 스케치



함께하는 사람들

구성원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김수영

우리 어찌 가난하리오
우리 어찌 주저하리오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웅켜진 뜨거운 흙이여
윤지영

우리도 언젠가 원수엮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 윤도현 '원수엮고래' 에서
염형국

공감과 함께
싸워주신 분들 덕분에
행복한 인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서연

함께 가는 길이 참 고맙습니다!

전은미

항상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황필규

공감
공익인권법재단

꽃빛이 울창한 숲이 되길

박영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신뢰와 격려에
오늘도 이자리에 있습니다.

안주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므로(요기 베라),
지금,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차혜령

손 잡아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신옥미

공감 13년차,
보내주신 응원 덕분에,
같은길 가는 사람들 덕분에,
신발끈 다시 묶고
화이팅합니다!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5 연간보고서

발행일
2016년 4월

발행인
전수안

발행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디자인
동방기획
TEL 02-2277-036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공감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장애인, 난민, 이주여성, 홀리스, 성소수자 등
세상 주변부에 선 사람들의 삶,
바로 그 자리에 뛰어가 법을 말하고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공감은 희망을 그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잠시 잃었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희망을 응원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 계좌 안내]

하나은행 162-910015-36804 (예금주 :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기 후원신청]

- * 홈페이지 : www.kpil.org (CMS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이 메 일 : gonggam@gmail.com

-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공감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 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기부금 영수증은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이듬해 1월 초에 우편 발송되며, 별도 발행도 가능합니다.
- * 2014년 귀속 기부금 영수증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공감 기부회원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연간보고서와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 2013년 12월 9일 발간 / 280쪽 / 14,000원

법의 새로운 사용법을 보여주는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이 책은 2004년도에 등장한 최초의 로펌 ‘공감’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현장의 생생한 에피소드와 함께 들려준다. 척박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인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법과 제도의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도 담겨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뜨겁게 앓고 고군분투하는 공감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희망의 기록’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주소 03058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전화 02. 3675. 7740 팩스 02. 3675. 7742

이메일 gonggam@gmail.com

블로그 withgonggam.tistory.com

홈페이지 www.kpil.org